

문재인 대통령 고성서 열린 전략보고회서 약속

철도·바다·항로 등 연결 정부가 나서 힘껏 도울것
황성 이모빌리티·춘천 수열에너지·삼척 수소시티 지원
산불 이재민 찾아 위로 ...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고성을 방문해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 조기 추진, 군사보호 규제완화, 동해안 관광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최문순 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갖고 오셨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참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 다음주 초에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면

문 대통령은 고성 DMZ박물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 인사말에서 "휴전선 중 5분의 3이 속해 있는 강원도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물도 강원도에서 흘러가고 강원도의 82%를 차지하는 산은 대한민국의 허파가 돼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의 시대'를 묵묵히 준비해 왔다"며 "이제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다. 정부는 평화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간 철도를 조속히 연결하겠다"며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발전의 대동맥이 되고, 한반도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의 땅길과

하늘길, 바닷길을 통해 평화경제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와 첨단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원주권의 중부권 거점지역 육성, 이모빌리티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황성의 강원형 상생일자리사업, 춘천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삼척 수소시티 사업을 하나씩 꼽으면서 "강원도 구석구석까지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략보고회에서 최문순 지사는 바닷길·철도길·하늘길 등을 통한 평화관광,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제도 도입, 강원형 일자리창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수련원과 피해 현장 등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어 거진항에서 도내 경제인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도는 칠성전망대·통일전망대 출입절차 간소화, 오색사도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시행 등을 건의했다.

이날 평화경제 비전 전략보고회에는 중앙부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 심기준·김정우 국회의원과 도내 13개 지역 시장·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 등 언론사 대표, 기업인, 실형민,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규호·최기영기자

“내가 사실상 오케이 했네” 발언에 간담회장 뜨거운 환호성

동서고속철 조속 추진 기대감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환경부가 도내 30년 숙원 사업인 동서고속철도 환경협의 통과를 염두에 둔 시그널을 보내 도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고성 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경제인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동서고속철도의 조속한 환경영향평가 비리는 요청에 큰 박수로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이 따르면 이미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져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이 지회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보다 큰 박수로 화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상 오케이를 했네”라며 크게 웃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 대통령과 함께 배석한 박전규 환경부 차관은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에 대해 강원도가

경제인 요청에 큰박수로 화답 환경부 “좋은 소식 기대하시라” 미시령 관동노선 기정사실화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미시령 관동노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문순 지사 역시 “평화경제, 강원비전” 보고회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히며 도의 입장대로 환경협의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날 지역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경제인은 “대통령께서 동서고속철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현장에서 큰 박수와 호응이 나왔다”며 “현장 분위기를 볼 때 조만간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오는 29일 동서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도에 공식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 분위기로 볼 때 도의 입장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기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고성 DMZ박물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지역 숙원사업·규제 개혁 건의에 긍정 화답

기업인·소상공인들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고성군 거진항의 한 횡집에서 도내 기업인, 소상공인들을 만나 도내 숙원사업과 규제개혁 등 지역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송신근(주)디피코 대표, 이미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최문진 강원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손덕규 고성 거진전통시장 상인회장, 정준화 통일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 등 도내 경제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인

DMZ 출입 간소화 등 요청 “강원경제에 힘 실어드릴 것”

들과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잡은 해산물로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산불 피해복구 독려, 강원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소개하는 비전과 발전 전략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강원도로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의주심사하는 캠페인 차원, 강원도 내에 새로운 평화관광상품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강원도 경제인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미옥(해송 KNS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져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박수로 화답해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송신근(주)디피코 대표는 “도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려 준비 중이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모델로 선정·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최문진 강원도아스콘공업협동

조합 이사장은 “군사작전 필수지역 이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와 DMZ 평화관광지인 칠성전망대, 통일전망대의 출입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준화(통일개발산업 대표) 양양군 변영회장은 “설악산 오색사도 설치와 관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려고 하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민통선 비무장 지대가 당장 평화지대로 바뀔 수는 없지만 점점 민간인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조기착공 탄력 받는다

대통령 "남측구간 조속 연결" 약속
예타조사 면제 등 정책지원 기대
부·울·경 추진위 출범 공감대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철도를 조속히 연결하겠다"고 밝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시작인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해북부선은 문 대통령이 밝혀온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SOC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성에서 열린 평화경제 비전 전략보고회에서 "우리는 동해북부선을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 대륙 반대편의 사람들이 이강해 바다를 찾아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해북부선의 강원도 발전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고성 DMZ박물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동맥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철도 연결의 의미를 역설했다. 지난 우즈베키스탄 의회 방문 당시

를 언급하며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를 향한 꿈을 말씀드렸다. 중앙아시아와 태평양이 만나는 가슴 설레는 희망을 얘기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강원도의 땅과 하늘, 바다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원도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동해북부선은 남한구간만 단절돼 있어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기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동해북부선 연결 부산·울산·경남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등 민간 차원의 공감대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해북부선 연결 부산·울산·경남 추진위는 지난 5일 부산에서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철희망래일 이사장, 나희성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동해북부선 연결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와 동북아 단일생활권, 통일 한반도를 이루는데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앞서 동해북부선 연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4월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가 구성됐고 9월 강원추진위가 발족, 침묵농기 캠페인에 속도를 내었다. 김여진

동서고속철 환경영향평가 조기 진행 약속

■도내 경제계 오찬 간담회

장기표류 동서고속철 해결 기대
최 지사 "영북지역 큰 소망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표류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기 진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고성을 방문,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동서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 건의를 받고 "동서철도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서철도는 지난 2016년 7월 동서고

속철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환경부가 환경훼손 문제를 지적, 또 다른 대안노선을 주문해 최적의 노선인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안 협의가 장기표류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는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설악산 국립공원 관통 노선으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2018년 7월 반려 결정을 내렸고, 도는 같은 해 11월 미시령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대안노선안을 마련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또 다시 도에 대안 검토 노선안을 요구하는 등 동서철도는 환경부 전·현직 장관 업무에서 사실상 제의, 동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조기 진행을 약속하면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안에 대해 환경훼손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 노선은 지하를 관통,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대통령께서 협의 조기 완료를 약속, 아주 큰 선물을 갖고 오셨다"며 "영북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인 동서철도 사업이 조기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환경부 협의 완료 후,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지난해와 올해 확보된 국비 192억원이 즉시 투입된다. 박지은